

문재인 정부 '사드 새 국면'

한·중 갈등 해결 돌파구?

文 “미·중과 진중한 협상”

북핵 해법 공감대 확장 기대

지난 9일 한국 대선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개막함에 따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간 갈등과 대립이 해결 국면으로 전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992년 한·중 수교 후 역대 최고라고 자랑하던 사드 이전 관계로 돌아가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박근혜 정부와 사실상 대화 단절 수준이었던 중국이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개선을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럼에도 사드 갈등과 대립을 거쳐 반한(反韓)·반중(反中) 정세가 서로 큰 영향을 준 탓에 향후 한중 관계는 이전보다 더 냉정하고 절제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드 갈등 넘어 협력 모색 가능성=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이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중국은 이미 박근혜 정부 이후를 대비한 기색이 역력하다.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작년 7월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소원해진 뒤 박근혜 정부가 아닌 새 정부를 대화 파트너로 삼겠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가운데

데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실패한 중국은 후(後)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희망대로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중국 역시 한중 관계 개선을 희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외교·경제 등 각 분야에서 중국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상대하기 위해 서로라도 미국과의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해법에도 韓中 “한 클리” 가까워질 듯=대북 강경론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당선인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온 중국과는 한 클리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북핵 해법인 쌍궤병행(雙軌並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 협정 협상,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문재인 당선인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중 접점 공유 영역이 이전보다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국 간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중국의 의대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까지 가담시킨 고강도 압박

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틀로 끌어내려서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대북 정책을 무시한 채 한국의 새 정부가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韓中 경제·문화 교류 단계적 개선될 듯=사드로 인해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면서 중국이 사드 부지 제공 측인 롯데 그룹에 대해 보복하고 한국 관광을 금지했으며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 조치를 함으로써 한중 간에 경제·문화 전쟁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한중 양국은 경제와 문화 분야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당연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중국 또한 주요 무역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 증진을 통해 자국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며 문화 분야의 교류를 막는 데도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사드 문제로 한국에 무차별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가하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중 한국기업들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가 4월 들어 잠잠해졌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현재보다는 중국 내 경영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 대북 공조 배격?

정부 대북관 미국과 이견

햇볕 및 ‘달빛정책’ 전방

미국 언론들은 지난 9일 실시된 한국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한국이 북한에 대해 더욱 유화적인 접근법을 취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에 주목했다.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라고 할 수 있다.

미 언론들은 아울러 전임 박근혜 정부와 미군이 합의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그동안 문재인 후보 진영의 대북관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보였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더 가까운 대북관계 옹호자가 승리했다’(South Korean Advocate for Closer Ties With North Wins Election)이라는 제목의 온라인판 톱 기사를 실었다.

WSJ은 서울과 워싱턴 사이의 마찰(friction)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전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1월 출간된 저서에서 한국이 “미국에 ‘노(no)’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북 공조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WSJ은 문재인 당선인의 인생역정을 다룬 별도의 기사에서 1950년 12월 흥남 철수 때 미군 함정을 타고 남쪽으로 피난한 실랑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하면서 “문재인 당선인과 북한의 복잡한 관계는 그의 출생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서울발 기사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북핵 이슈로 대치 중인 (한반도의) 지정학을 뒤엎을 수 있다”면서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와 이산가족 상봉, 경제교류 재개 등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핵심 동맹국이 대북 화해정책을 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한국인들이 중도좌파 후보에 투표했다”면서 “문 후보 당선은 10년간의 보수 정파 통치를 종식함과 동시에 보수적 정책을 써온 앞선 두 정권으로부터의 이데올로기 전환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당선인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 재개를 원하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CNN방송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미군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은 박근혜 정부의 강경 보수 정책과는 상반된 것으로, 한국의 기존 대북 정책을 흔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미 언론에선 ‘달빛정책’(Moonshine)이 펼쳐질 것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문재인 당선인의 성(姓·Moon)에 빗대 과거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한국특파원을 지낸 영국 언론인 마이클 브라운은 “한국, 달빛정책의 시대에 접어들다”라는 제목의 WSJ 기고문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달빛정책은 더 현실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당선인의 주된 관심사는 대치국면을 완화하고 전쟁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달빛정책’으로 표현하면서도 “북한과 중국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다소 부정적인 톤으로 바라봤다. /연합뉴스

트럼프 “FBI 국장, 넌 해고야”

‘러 내통 의혹’ 무마 비협조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롤러코스터 관계’가 결국 국장직 해임으로 끝맺음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든 ‘일등공신’에서 정권 출범 후 ‘노릇가사’로 전락한 코미 국장은 10년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짐을 싸게 됐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장관의 건의를 수용해 코미 국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코미 국장은 지난해 미 대선판을 요동치게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7월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을 조사한 결과 불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메일 스캔들은 클린턴이 국무장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코미 FBI 국장.

관 사절 사설 이메일 서버로 기밀을 포함한 공문을 보낸 사건을 말한다.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이었지만 판세는 석 달 후 코미 국장이 이메일 스캔들을 재조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뒤집힌다. 대선을 불과 11일 앞둔 지난해 10월 28일 코미 국장의 폭탄 발언은 대선판을 흔들며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코미 국장을 그대로 중용했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지만 대선 일등공신을 그대로 꺼안은 셈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지난 3월 코미 국장이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후라는 분석이 많다. 코미 국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 오바마 행정부의 트럼프 캠프 도청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일각에선 ‘오바마 도청’ 주장을 앞세워 러시아 내통 의혹을 몰타기 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미 국장이 반기를 들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원칙을 중시하는 코미 국장의 간간한 성격과 고집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이 있다.

근거 없는 도청 주장으로 수사·정보기관의 신뢰를 흔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미 국장이 반감을 품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짓곳은 바람 10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미사 도중 그의 망토가 바람에 날려 얼굴을 휘감고 있다. /연합뉴스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천연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영광 전원주택 매매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매가 1억 (용 2천)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청담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룠 28개 (월수의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 감정가 45억 → 최저가 25억
- 동구 대인동 (4층 상가 주택) 토 128평, 건 250평 월세 약 300만 가능 (4층 주택) ▶ 감정가 8억8천 → 최저가 8억8천
- 영암군 삼호읍 (주유소) 토 1,036평, 건 419평 영암교차로 코너 ▶ 감정가 23억 → 최저가 10억
- 영광군 홍농읍 (선박건조업 공장) 토 37,546평, 건 1,649평 영광 철교 농공단지 내 위치 ▶ 감정가 570억 → 최저가 200억

기타 상가(소액) 물건 추천

1. 북구 신안동 (10층중 3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실평수) 광주역 1분 (월수의 100만) ▶ 감정가 1억4,600만 → 최저가 5천2백
2. 광산구 쌍암동 (10층 중 6층 오피스텔) 토 1평, 건 8평 (실평수) 보 300만 월 30만 ▶ 감정가 6천 → 최저가 2천7백
3. 상무지구 오피스텔 (13층 중 11층) 토 2평, 건 14평 상무역 1분, 상무지구 중심가 보 500만 월 40만 ▶ 감정가 8천6백 → 최저가 6천만
4. 남구 주월동 (토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123평) 남구청 1분, 4m 도로 접 ▶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5. 서구광천동 (주택) 토 51평, 건 53평 광천동 재개발 지역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7천

1 경매 기초반

▶ 매주 10시 30분
경매기초부터 ~ 입찰까지

2 경매 실전 전문반

실전 교육등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입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직원모집

경매 부동산 같이 할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062-511-7800

010-6670-9800

010-7384-7800

010-2699-5300